

공식행사
전체회의

발 제 문

호세 쿠에스타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인권경제에 관한 중요한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영광으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빈곤, 불평등 인권에 대한 논의는 항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주제이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간 세심한 균형을 요하는 도전과제와도 같다.

(1) 사실과 증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다.

세계은행에서는 2019년 전 세계 인구의 8.4%가 2.15 달러 PPP 미만으로 살고 있다고 추산했으며, 이러한 빈곤율은 현재 2022년에도 변함없는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투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극 빈곤층의 비율은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57%, 남아시아에서는 13%로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보건, 교육 및 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도시 및 지방 간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뿐 아니라, 디지털 및 문화 공간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 역시 위엄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 요인이 되며, 이는 인권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많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만을 가지고는 도시 내 빈곤 또는 불평등을 측정할 수 없다. 도시 간 또는 빈곤 지역 간, 또는 성 소수자 및 장애인과 같은 특정 취약 계층 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위성 데이터(야간의 조명은 인구의 증가를 의미), 행정 데이터(특정 서비스나 사회적 지원금에 대한 접근성 관련), 또는 지리적 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 중 어느 것도 도시 내 빈곤, 평등 또는 포용성 유형 및 동향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포괄적인 진단 및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다.

전 세계 빈곤 감소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빈곤율은 증가할 것이며 같은 시기까지 극빈곤이 퇴치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이 감소한 만큼이나 국가 내 불평등은 증가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전체적인 불평등의 수준을 볼 때 전 세계 불평등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극빈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도시 역시 이러한 유형 및 미래 동향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4) 하지만, 도시 지역을 포함해, 각기 다른 상황 및 지역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빈곤 및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많은 정책적 증거를 볼 수 있다.

- 유아기 어린이 발달 및 영양 관련 정책
-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 빈곤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
- 교통 및 전기와 같은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 누진과세

이러한 모든 정책 및 대책들은 도시 간 그리고 도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지방 자치정부가 최전선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를 위한 정책 협상에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자원 마련 및 배분,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자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는 의사 결정의 범위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금성 지원과 같은 국가 정책 시행에 뒤 따라는 혜택이나 이익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도시가 전략 실행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한 역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빈곤 완화 및 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가 도시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5) 그렇다면, 이러한 단순한 낙관적 예측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열망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미있는 인권 경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회의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우리는 빈곤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인권의 원칙과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6가지 정책과 같은 정책들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 불가피한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빈곤 및 불평등을 도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이는 충분한 정치적 합의나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일 것이다.
- 인권경제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과 헌신의 문제이다.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이다.